

- ① 관세청, K-뷰티·푸드, 원산지증명서 부담 완화
- ② 한국무역협회, “RCEP 활용, 발효 연차에 따른 관세 실익 주목해야”
- ③ 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열풍에 ‘떡볶이’ 수출 급증
- ④ 산업부, (1)한-필리핀 FTA 발효  
(2) 한-파키스탄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정 추진  
(3)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논의
- ⑤ 산업부·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2024’ 발간





## FTA 동향

### 관세청, K-뷰티·푸드 원산지증명서 부담 완화

앞으로 K-Beauty, K-Food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입증서류 제출을 대폭 줄인다. 재활용 원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별도 서류 없이 'GR 인증서' 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으로 현재 FTA 활용률은 수출 86.3%, 수입 85.4%로 FTA 활용 안정기에 진입했다. 다만 아세안, 인도 등 수입국 세관은 원산지증명서(C/O) 진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FTA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상품성은 갖췄지만,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웠던 K-Beauty, K-Food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필요한 입증서류 제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입증 자료 등 8종을 제출해야 했지만,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유관기관 발급인증서로 대폭 줄인다. 립스틱·마스크팩·아이섀도·마스카라 등 화장품류 6개 품목 등에 대해 원산지 간이 확인 품목을 올해 상반기 중에 지정하고, 활방어,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원산지를 인증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간편 인정 품목을 하반기 내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생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와 중고차 차대번호 확인서 각각 1종을 원산지 입증서류로 인정한다. 중고차 수출량이 많고 활용 효과가 높은 중남미 등 국가와 우선 협력하고, 폐배터리·폐플라스틱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재료를 생산한 제품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올 하반기 내 추가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FTA 저활용 수출품목·지역·기업군에 집중 지원에 나선다. 협정별 미활용 품목 등 저활용 품목, 수출활용률 70%대 지역,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핀포인트를 지원하는데, 연 수출 1억달러 초과 중 수출 활용률 30% 미만 품목, 연 수출 1000만 달러 초과 중 미활용 품목이 집중지원 대상이다.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선했고, 수출 희망기업 등을 위해 FTA 전문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검증 리스크 없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키우고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1만5000개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원산지관리 고위험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확대 등 해외통관 지체를 줄이고, 원산지검증 협력회의를 실질적인 협력 채널로 정립해 FTA 활용 리스크를 완화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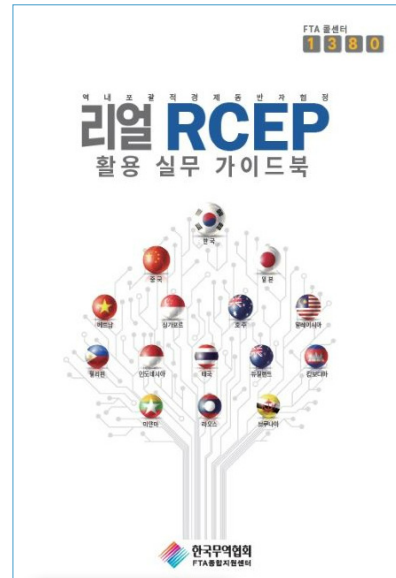




## 한국무역협회, “RCEP 활용, 발효 연차에 따른 관세 실익 주목해야”

한국무역협회 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한 ‘리얼 RCEP 활용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발효 4년차를 맞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게 핵심 내용과 활용 전략, 실무 중심의 협정 활용 사례가 서적으로 정리된다. 특히 체결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RCEP 인식 및 활용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해 RCEP 활용 실태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 현장감 있는 정보가 담겼다.



2022년에 발효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와 RCEP 국가 간 교역규모는 586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약 46%를 차지한다. RCEP은 단순히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 규정 통합, 서비스 시장 개방,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 무역규제 완화와 규범 단일화를 이루어 내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

사진 : 뉴시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실장은 “RCEP은 발효 연차가 커질수록 관세 실익 및 비용 절감이 증대되는 구조로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등 기체결된 FTA를 보완·대체해 나갈 것”이라며, “당장은 RCEP의 관세혜택이 기체결된 FTA보다 적은 경우라도 우리 기업들은 RCEP 발효 연차에 따른 혜택과 활용 가능성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해당 발간물은 지역 FTA통상진흥센터,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FTA 통합플랫폼(okfta.kita.net)에서 이북(E-Book) 형태로도 열람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K-푸드 열풍에 ‘떡볶이’ 수출 급증

국내 떡류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수출 확대 배경에는 ‘떡볶이’가 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영화 등의 영향으로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 떡볶이를 비롯한 분식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 국내 식품회사들의 떡볶이 수출도 크게 늘었다. 이같은 성장에 정부는 물론 식품업계에서도 떡볶이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4년 떡류 수출액은 9140만달러(약 1,313억원)를 기록했다. 1억만달러에 육박했던 지난해 떡류 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최대 수출 규모를 경신했던 2023년(7,776만달러)과 비교해도 17.5% 증가한 수치다.

### [우리나라의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HSK 1901.90-9091호)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불

품목명	2022		2023		202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타(쌀가루의 것)	64	-2.7	78	21.4	91	17.5

자료 : Kita 수출입통계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 소비가 확산되면서 떡볶이 수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영화, 드라마 등 국내 콘텐츠 소비를 통해 대중적인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사진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 해외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단체 급식과 연계하여 떡볶이, 쌀 가공식품, 김치 등 주요 식자재 수출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도 마찬가지로 떡볶이를 포함한 K-푸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펼치고 있다. 2024년 12월에 aT 현대그린푸드와 MOU를 체결하고 미국 현지 공장에서 떡볶이, 김치 햄버거 등 K-푸드를 제공하는 급식 이벤트를 열기도 했다.

aT 관계자는 “K-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해외 소비자들이 떡볶이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 식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내 식품업체들과 협력해 시식 행사 및 다양한 B2B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① 한-필리핀 FTA 발효

### ② 한-파키스탄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정 추진

### ③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논의

## ① 한-필리핀 FTA 발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었다.

이날부터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5%)가 철폐돼 대필리핀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0%에 달하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져 향후 국내 바나나 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수출입 기업들은 한-아세안 FTA와 한-필리핀 FTA, 역내포괄적경제



사진 : 연합뉴스

동반자협정(RCEP) 중 관세율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이번 한-필리핀 FTA 발효로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에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

한국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철폐한다.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가 내려간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산업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② 한-파키스탄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정 추진

정부가 파키스탄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와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 협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서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해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세계 5위 인구대국인 파키스탄은 풍부한 노동력(인구 2억5000만명, 청년층 비중 30%)과 천연자원(석탄·천연가스·구리)을 보유한 서남아시아 대표 잠재시장으로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경제권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다.

한-파키스탄 EP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는 우리 측의 수출 잠재시장 확보, 파키스탄 측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여 등 양측 모두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정보기술(IT),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해당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③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논의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 7차 공식협상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2024년 3월, 한-말련 FTA 협상재개 선언 이후 세 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협정문 전반에 걸쳐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7차 공식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1개 분야별 협상을 진행하며 시장접근 협상을 포함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FTA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주요 협력국인 말레이시아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신속히 타결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 산업부·KOTRA, ‘우수사례집 2024’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해외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에 성공한 기업사례 16건을 담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2024”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인도, 베트남, 중국 등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소재한 9개국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와 극복사례를 (1)비관세장벽 (2)품목분류 (3)원산지증명서 등 유형별로 분석하고, 사례별 실천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사례집에 소개된 주요 사례다.



사진 : KOTRA

### #1 (비관세장벽) 중국의 수입식품 대상 감독 강화에 유의

최근 한류 영향으로 중국에서도 K-푸드가 인기다. 중국 내 식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해관에 해외생산업체로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3개년 단위로 유효기간 만기 3~6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한다.

수출기업 A사는 중국 해관의 갱신 승인이 지연되어 판매식품 전량이 폐기처분 위기에 처했으나, 중국 칭다오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중국 내 유통을 지속할 수 있었다.

### #2 (품목분류) 현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통해 통관보류 해결

품목분류는 우리나라와 수출국의 상이한 HS코드 분류체계로 인해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대표 애로유형이다. 특히 인도 세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통관 보류나 예상 밖의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휴대폰 케이스를 취급하는 기업 B사는 인도 세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인도에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사전심사제도는 수출 희망품목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등을 사전에 심사받고, 심사 내용이 통관 시 구속력을 갖는 제도이다.

### #3 (원산지증명서) 제3국 경유·환적 때 FTA협정 적용

C사는 완제품 생산과 수출에 필요한 미국산 중간재를 한-미 FTA 혜택을 적용받아 한국으로 수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품이 베트남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어, 한-미 FTA의 직접 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호치민 FTA센터는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제안하고 준비서류 및 절차를 안내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도록 지원했고, 문제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집 2024”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에서 무료 PDF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